

“삼성 새만금 투자, 없었던 일로 처리 중”

도의회 양용모·국주영은 의원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 없어
전북도와 협약 체결 경위
배경 따지고 후속책 밝혀야”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과 국주영은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없었던 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관련자들의 무책임을 규탄했다.

이들은 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나 그 기대가 공식적인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면서 “국무총리실에서 가진 약속이 지연되면서 도민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 허탈로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책임있는 정부부처와 초일류기업 삼성, 도민의 대변자인 전북도가 함께 약속한 서명자가 휴지조각이 됐다. 그리고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사태를 방관할 수 없고 다시는 이런 도민 기만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과 양용모 의원은, 3일 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없었던 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관련자들의 무책임을 규탄했다.

록 삼성의 새만금 MOU 체결 경위와 배경을 따지고 후속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배경과 투자 약속 등을 확인하기위해 가

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구성안)를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통해 2011년 새만금 투자 협약서 관련 당사자인 국무총리실,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북도의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

다. 아울러 새만금 투자 약속을 파기한 삼성의 무책임과 도민우롱 사과 요구 등을 전 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새만금투자 MOU는 체결당시부터 LH 전북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탈락기용 정치 쇼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민심을 진심이 아닌 정치적 술수로 탈탈 수 있다는 무지와 오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문제를 분명히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용모 의원은 “대기업이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은 무책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1년 4월 27일 정부(국무총리실·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와 전북도·삼성그룹은 “새만금 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주 내용은 삼성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총 3단계로 나누어 풍력발전기와 태양 전지 등 그린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골자다.

하지만 양해각서 체결이후 5년이 지난 현재도 확실한 계획이 없어 지역내에서 민심탈락기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이춘석 의원 “진짜 호남 민심이 뭔지 알아야”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전당대회 개최 문제가 아닌 진정한 호남 민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3일 ‘전대관련 호남민심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대 개최를 주장하는 쪽도, 연기를 주장하는 쪽도 모두 호남민심을 이야기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호남민심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호남민들은 전대를 언제 하느냐에 관심이 없다. 다만 수권능력을 키울수 있느냐를 놓고 관망하고 있다”면서 “호남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모두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호남은 사랑을 물려주면 울음을 멈추는 어린이가 아니다. 또 호남의원들에게 지리 좀 떼게 더 배려하고 몇번 더 방문하면 되겠지하는 특별 관리 대상도 아니다”며 “호남이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어머니고 정신이라면 반사 이익에 도취되지 말고 다시 세우야 할 게 무엇인지 깨달길 바란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노회찬 당선인

정의당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만장일치로 노회찬(경남 창원성산) 당선인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워크숍에 참석한 모든 당선인들이 원내 4당 체제를 맞아 냉철하고 경합이 풍부한 3선 노 당선자가 원내를 이끌 적임자라는 사실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노 당선인은 진보신당 시절인 2008년 공동대표를, 2009~2010년 진보신당 대표를 맡았으며 2012년엔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정의당은 20대 총선에서 노 당선인과 심상정(경기 고양덕양) 대표 외에 지역구 당선인을 내지 못해 지도부를 꾸리는 데 사실상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정의당은 정당투표에서도 한자릿수의 득표율을 기록, 4명의 비례대표를 내 20대 국회에 총 6명이 입성하는 데 그쳤다.

두 명의 지역구 당선인 중 노 당선인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정의당 지도부 체제는 당분간 심 대표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 대변인은 “두 3선 의원이 원내와 당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함께할 것”이라며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야당 속 야당, 주요 민생 제제들을 견인해갈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추천으로 나머지 원내지도부 구성원을 꾸리기로 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광주 회의에서 지도부 선인과 더불어 20대 국회에서 추진할 입법과제에 관한 논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선 20대 국회 상임위 배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노 당선인은 법사위, 윤소하 당선인은 보건복지위, 이정미 당선인은 환노위, 추혜선 당선인은 미방위, 김중대 당선인은 국방위로 가담이 잡힌 가운데 심 대표는 정부위에 무게를 두면서 기재위도 고려 중이다.

이성주 기자

새누리 신임 원내대표에 정진석 의원

3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진석 당선인이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 당선을 확정지었다.



정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6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전체 119표 중 69표를 얻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출마한 김광림 의원 역시 당선됐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한다”며 “오로지 믿는 것은 국민뿐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1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이 시간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다”고 운을 폈다.

정 원내대표는 “18개월 후에 뭘 이뤄야 할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새누리당 마무리 투수결 선발 투수를 하겠다. 박근혜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권의 선발투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혼자는 어렵다. 우리가 다 함께 고단한 여정을 함께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뭉쳐야 한다.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협치와 혁신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활로를 열겠다”며 “당선인 한명 한명 지혜와 역량을 모아 자율성, 정책전문성을 극대화해 최고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 등 돌린 민심, 회초리 든 민심을 되찾아오겠다”며 “저는 많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한번 한번이 한 배를 탔다는 공동운명체라는 공감대감으로 뭉쳐달라”고 호소했다.

김광림 신임 정책위의장은 “시장주의와 실용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정치를 의원들과 소통하고 이뤄가면서 이뤄나가겠다”며 “합의달탄한 당의 모습을 이뤄가는데, 협치와 협심의 정치를 이루는 데 원내대표와 앞으로 있을 당대표를 모시고 열심히 심부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혜선, 윤소하, 노회찬 당선인, 심 대표, 김세균 공동대표, 이정미, 김중대 당선인.

더민주 전당대회, 잡음없이 8월말~9월초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정기전당대회를 8월말~9월초에 열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논의한 결과 당헌과 당규 규정에 따라 8월말~9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정기국회 이전에 여는 것을 의결했다고 박광온 대변인이 밝혔다.

더민주를 또 경제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그 구성의 권한을 당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기존의 경제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경제관련 기구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변인은 두 기구의 차이점에 대해

“차이와 유사성은 확인해야겠지만 큰 틀에선 같이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더민주가 이 문제 보다 책임있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신실하게 됐다”

그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추후 경제비상대책기구의 대표를 맡을 가능성에 대해 “대답하기 어렵다”면서 “정책위의장이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 대표가 이 기구는 직접 챙기겠다고 얘기했다”며 “특위 인선도 대표가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대 개최 시기는 앞서 열린 20대 국회 당선인·당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가닥이

잡혔고, 당무위에서 곧바로 의결됐다.

연석회의에서는 박홍근·안민석·윤호중·이원욱·설훈 등 5명이 공개 발언을 했다. 이들은 전대 개최 시기로 8월말~9월초가 적당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당초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놓고 당내 범주류와 비주류간 험투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연석회의에선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이 없었다.

박 대변인은 “전대의 8월말~9월초 안에 의의가 있느냐고 3번을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고, 박수로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연석회의에서 정당법과 당헌 당규를 제시하며 전대 개최시기에 대한

경제비상대책기구 설치 권한 당대표 위임 의결
김종인 대표에게 새 역할 부여한 듯 관측도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윤 의원이 정당법 19조에 시·도당개편대회의 소요되는 시간은 최장 3개월로 규정해놓은 근거가 있다고 제시했다”며 “중앙당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시간 2개월을 더해 5개월 이내에 전대를 개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전당대회 연기론과 합의추대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이날 전당대회 연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날 8월말~9월 초 전대 개최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보탤

이성주 기자

전북도 무형문화재 전수자 맥 끊길 위기

이수과정 마쳤음에도
보유자 인정받지 못해

전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관련 문화재 보유자 인정받지 못해 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도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을 거쳐 이수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때문에 해당 무형문화재가 사장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 모씨(67)는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7-2호(정음농악 ‘실장고’) 이영상 보유자의 유일한 전수 장학생이다.

이 영상 보유자는 지난 2007년 9월 작고한 상황이며 고 씨는 최근 전북도 긴급보호 무형문화재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신청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고 씨는 받아들여지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이유는 현행 도 조례에서 도 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체 종목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전체 회원 3/5 이상의 추천 서명을 첨부해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례 수정(안)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라도 그 맥을 이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행 조례가 사실 단체 대표의 직권 남용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줄 세우기를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정부패 행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타 지역의 경우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타 지역의 경우 새로운 보유자를 선정하지 못해 겨우 명맥만 있고 있는 상태가 비일비재하다.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호 영감놀이, 제7호 덕수리 불미공예, 제10호 멀치 후리는 노래, 제13호 제주르곳, 제16호 제주농요 등이 보유자가 없는 문화재들이다.

이들 무형문화재는 전수조교와 전수 장학생만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후계자가 없어 대가 끊길 판에 고 씨처럼 전수 장학생을 거쳐 이수 과정을 마치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조차 할 수 없는데 심각성은 더한다.

문화재 한 관계자는 “정음시민농악연구회가 지난 4월 29일 ‘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수정(안)을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정(안)에는 도지정문화재 단체종목 보유자 인정 신청은 보유단체대표자 또는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전북도’가 지정한 전수 장학생이나 이수자는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 씨의 신청인은 지역 해당 보유자 문화위원장, 예총회장, 국악협회장 등의 추천서명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면서 “모든 지방생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규칙이 필요하고 보유자의 적합성 평가 기준을 조사자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을 통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野, 아버지연합 의혹 대응 움직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보수단체 대한민국아버지연합 지원 의혹과 관련해 공동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동대응이 성사될 경우 양당이 총선 후 처음으로 야권 공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더민주 ‘아버지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소속인 박병계 의원은 “국민의당을 향해 ‘국민의당도 적어도 아버지연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진실을 검증하고 책임을 물겠다’고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의당이 오늘이라도 TF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나와 미팅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국민의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임내현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더민주와의 공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면 하는 것이다. 보고 검토해서 대응할 하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우선 1차 TF를 당내에 꾸렸고 우리 법률위원회 소속 실무위원을 보강하려고 한다”며 “이제 활동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